

“지역 소멸위기 극복 행정·산업 새 패러다임 모색 필요”

광주와 전남이 행정적으로 분리된 지 40년 만에 다시 하나가 돼 오는 7월 전남 광주통합특별시로 출범한다. 인구 320만 명, 지역내총생산(GRDP)은 160조원 규모에 육박하는 초광역 자치단체의 탄생을 위한 행정, 경제, 교육 등 전 분야에서 대대적인 변화가 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본보는 전남대학교 지역개발연구소와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 한국지역정책학회 등과 함께 행정통합에 따른 지역의 변화와 발전 방향성을 모색해 왔다.



11일 오후 광주 북구 용봉동 전남대학교 경영대학 1호관 CBA홀에서 '광주·전남 행정통합, 지역 발전의 새로운 전환점'이란 주제로 열린 초광역 행정통합 포럼에 참석한 이송배 광남일보 사장과 배정환 전남대 지역개발연구소장, 홍준현 중앙대학교 공공인재학부 교수, 김승년 산업연구원 지역산업입지연구실장 등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오는 7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을 앞두고 11일 열린 '초광역 행정통합 포럼'에서는 지역 발전의 새로운 전환점을 모색하기 위한 행정체제 개편, 산업 전환 등의 다양한 의견이 제기됐다. 특히 지역 소멸위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방안인 정부의 '5극 3특'을 중심으로 다채로운 해법이 나왔다.

'초광역 행정통합과 따른 행정체제 재설계 정책과제'라는 주제로 발제한 홍준현 중앙대 공공인재학부 교수는 행정체제의 새로운 패러다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지방의 인구 감소를 일차리 부족으로 진단, 산업 문제를 우선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특히 지방의 성장을 이끌어 온 것은 산업도시라 규정하는 그는 "거점도시를 약화하고 있다. 부산·대구·울산 등은 30년 후 25% 이상 인구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광주 또한 20% 수준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비수도권 성장 유체에 장애 요소로 작용할 것이며, 시·군·구 단위에서의 인구 감소는 더욱 심각하고 지역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통계도 나온다"고 언급했다.

이로 인해 교통 인프라는 농촌 지역의 행정체제가 유지될 수 있는 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인구가 급격히 감소해 지방자치체 제대로 실현할 수 없다는 날이 올 수 있다는 의견이다. 향후 사람이 살지 않는 지역이 될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인구 감소를 타개하기 위한 방안으로 국토공간의 대전환을 제시했다. 불일치한 생활권과 행정구역을 정책적으로 연결해야 한다는 의미다.

그는 "인구 규모로 봤을 때 거점도시와 시·군 단위의 세입 차이는 없지만 세출은 역의 합수를 뺀다. 인구가 적은 곳이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있어서 비용이 과해진다"며 "중앙정부의 지원을 필요로 하지만 국가 정책적으로 봤을 때 밝은 전망은 아닌 게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에서는 5극 3특보다 확장된 국토공간 대전환 프로젝트를 수립했다"며 "권역 단위의 전략산업, 전체의 시너지를 낼 전략산업을 도출하는 의미이며, 새롭게 권역을 구축해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기 위한 5극 3특의 연결과 역할 배분을 도출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기업이 투자를 결정할 때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요소는 고용 부지 확보와 파격적인 인센티브"라며 "특별지방행정기관 사무관한을 활용을 인허가 절차를 단순화하는 행정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파격적인 재정 지원과 세제 특례를 통한 수도권 기업의 이전 지원도 중요하다"며 "수도권 공공기관 2차 이전과 연계해 민간 대기업이 동반 이전할 수 있도록 강력한 유인책을 마련하고 이를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또 지역 특화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한 초광역 인제 양성을 비롯해 RE100 리더십 선점을 통한 지역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행정 효율성 극대화를 위한 과감한 산하기관 통폐합을 주장했다.

이준범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 경제조사팀장은 광주와 전남이 단순 물리적 결합을 넘어 하나의 경제·사회공동체로 발전하기 위한 방안을 제안했다.

이를 위한 방법으로 행정조직의 구성과 예산 배분 방식의 명료화, 광역 교통망 확충을 통한 지역 내 접근성 향상, 주력산업의 고부가가치화 및 AI·재생에너지 등 신성장 동력 산업 육성, 중장기 지역경제발전을 위한 컨트롤 타워 필요 등을 제시했다.

그는 "저출산·고령화 등에 따른 인구감소와 수도권 집중으로 지방소멸 위험이 심화하고 있다"며 "광주와 전남의 행정통합은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균형발전을 위한 방법으로 행정조직의 구성과 예산 배분 방식의 명료화, 광역 교통망 확충을 통한 지역 내 접근성 향상, 주력산업의 고부가가치화 및 AI·재생에너지 등 신성장 동력 산업 육성, 중장기 지역경제발전을 위한 컨트롤 타워 필요 등을 제시했다."

그는 "혁신을 주도할 앵커기업 유치로 통해 지역 R&D 자원을 결집해야 한다"며 "기존 지역산업육성정책의 개선방향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정부의 '5극 3특'에 맞춘 지역산업 육성 정책의 효율성 향상, 변화하는 산업구조에 발맞춘 산업정책의 공간적 타깃의 재정, 대형 협력 프로젝트 중심의 초광역권 전략 수행체제의 단계적 구축 등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균형성장을 뒷받침하는 지역인제 양성을 비롯해 산·학·연 혁신 성장 거점 조성의 필요성도 주장했다.

이준범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 경제조사팀장은 광주와 전남이 단순 물리적 결합을 넘어 하나의 경제·사회공동체로 발전하기 위한 방안을 제안했다.

이를 위한 방법으로 행정조직의 구성과 예산 배분 방식의 명료화, 광역 교통망 확충을 통한 지역 내 접근성 향상, 주력산업의 고부가가치화 및 AI·재생에너지 등 신성장 동력 산업 육성, 중장기 지역경제발전을 위한 컨트롤 타워 필요 등을 제시했다.

그는 "저출산·고령화 등에 따른 인구감소와 수도권 집중으로 지방소멸 위험이 심화하고 있다"며 "광주와 전남의 행정통합은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균형발전을 위한 방법으로 행정조직의 구성과 예산 배분 방식의 명료화, 광역 교통망 확충을 통한 지역 내 접근성 향상, 주력산업의 고부가가치화 및 AI·재생에너지 등 신성장 동력 산업 육성, 중장기 지역경제발전을 위한 컨트롤 타워 필요 등을 제시했다."

을 강조했다. 좌장을 맡은 배정환 전남대 지역개발연구소장은 "오늘 포럼이 단순한 학술 논의를 넘어 광주·전남의 미래와 대한민국 균형발전의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는 뜻깊은 자리가 됐길 바란다"며 "각 분야 전문가들로부터 제기된 의견이 지역의 미래를 위한 마중물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신하 기자 goback@gwangnam.co.kr

‘5극 3특’ 중심 국토공간 재편… 거점도시 역할 재정립 필요성 제기 석유화학 의존 탈피·앵커기업 유치… 지역산업 구조 전면 재편 요구 재정 지원·세제 특례 통한 기업 육성·우수 일자리 창출 ‘한목소리’ 광주특례시 전환… 3개 청사 역할 분담·조직·사무 분장 해결 주문도

참여, 행정통합의 주요 쟁점과 통합특별시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신우진 전남대 경제학부 교수는 거점 도시로서의 위상이 흔들리는 위기 극복, 군 단위 행정 서비스 공백 방지를 위한 맞춤형 기능 조정, 광주시의 특례시 전환, 산업 구조의 고도화와 지역 간 연계 강화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특히 경제, 산업, 교통 수요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광주시의 특례시 전환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광주시의 특례시로 전환하고 일반 구를 두는 방안은 전문가들로부터 높은 지지를 받아왔고, 이는 통합특별시의 유기적 기능 유지에 적절하다"며 "통합을 위해서는 단순히 행정 구역의 분할을 넘어 정부 환경 전반에 걸쳐 서로 연계 발전할 수 있는 재정 지원이 확실한 담보돼야 한다"고 말했다.

조기선 광주 CBS 대표는 통합 후 주청사 문제, 3개 청사의 역할 분담 등 주요 쟁점을 다뤘다.

그는 "광주시가 폐지된 뒤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22개 시·군 은 물론 5개 자치구를 직접 관장하는 현 체제가 과연 효율적으로 작동할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며 "특별시와 시·군·구 간 기능 배분, 광역사무와 기초사무의 구분이 충분히 논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6. 6. 3. 실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정보 카드뉴스

'사전투표제도'

문제 없다, 합헌 결정

(헌법재판소 2025. 10. 23.)

#사전투표 #부정선거 #팩트체크

합헌 판단 이 유 1 "사전투표제도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장치가 마련되어 있다"

- 일반 인터넷망과 완전 분리된 **선거전용통신망**
- 선거 부정 여부를 검증할 수 있는 **실물 투표지 존재**
- 투표용지발급기 사전투표관리관에 인계 시 **통합·통인된 상태 유지**
- **후보자가 선정한 참관인**의 사전투표 상황 참관

합헌 판단 이 유 2 "현재의 사전투표기간은 선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 사전투표자가 선거일 투표자에 비해 짧은 숙려기간을 갖더라도 (**예비후보자**) 선거운동 등을 통해 **후보자에 대한 정보 획득 가능**
- 사전투표제도는 **선거권 행사 기회 보장·투표를 제고**

합헌 판단 이 유 3 "사전투표제도는 비밀투표 원칙을 침해하지 않는다"

- 투표용지의 일련번호 표기 형태인 **바코드에는 선거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정보 미포함**

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